
2019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강 원 도
(감 사 위 원 회)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내역	금액 (천 원)	
			계 : 7건	계 7 시정 2 주의 3 통보 2	계 추징	543 543	계 2 훈 계 2
1	★★군(●과)	'18~'19	소하천점용허가 점용료부과 부적정	시정			
2	★★군(⊙실)	'18~'19	민원처리기간 지연 및 보완요구 처리 부적정	주의			
3	★★군(⊙실)	'16~'18	민원안내 점자책자 및 안내판 설치로 소수민원 적극 해결	통보 (모범사례)			
4	⊗⊗군(●과)	'17	하천점용허가민원처리 부적정	주의			훈 계 2
5	⊗⊗군(☺과)	'18~'19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통보 (시정완료)			
6	⊗⊗군(⊙실)	'18~'19	민원처리기간 준수 관리 소홀	주의			
7	⊗⊗군(●과)	'17~'19	하천 및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관리 소홀	시정	추징	543	

[일련번호: 1]

강 원 도

시장·주의 요구

제 목 소하천점용허가 점용료부과 부적정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과)에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르면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소하천 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되, 다만, 1건만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으며,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3/100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점용은 경작, 식물의 재식, 광업, 내수면 어업, 야적장, 관로 등 매설, 기타 목적으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별표 1)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3/100
2. 토지(소하천 등의 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개정 2007.5.25></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95. 7. 6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의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0.75/ 100((소하천에 한함)</p> <p>마. 아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5/100</p> <p>바.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 토지가격의 1.5/100</p>

따라서 ★★군(●과)에서는 점용료 부과 시 「★★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여부, 토지의 점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점용목적에 적합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공작물의 설치(통신주 11본)를 위하여 △△에 신청한 □□리 ×××-× 및 ×××-×번지 일원 소하천 점용허가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에 따른 요율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을 곱한 금액의

3/1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타 목적을 위한 토지의 점용으로 판단하여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을 곱한 금액의 1.5/100을 적용하는 등 총 41건의 소하천점용허가 산정기준을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소하천 점용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군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내역

※ ★★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시정] 2018년부터 2019. 7. 10. 감사일 현재까지 소하천 점용료 부과시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과한 건에 대하여 「★★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맞게 재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시 관련규정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민원처리기간 지연 및 보완요구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과)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에 관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2회로 한정하여 요구하고 정한 보완기한 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 ★과 등 7개 실과 및 면에서 [표 1]과 같이 총 21건의 민원에 대하여 기한 내 처리하였지만 시스템 미입력, 연장기한 미입력,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등 법정 처리기간이 최대 97일 초과하였는데도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해 실과 및 면에 통보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민원처리기간 지연 건수

(단위: 건)

계	10일이상	20일이상	30일이상	40일 이상	50~100일
21	8	3	3	1	6

※ ★★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참조

또한 ★★군(◆과)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업무 지침 등의 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과 등 6개 부서에서 [표 2]와 같이 27건에 대하여 구비서류 미비 등 민원처리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2회를 보완요구하고, 보완이 안되었을 경우 10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 재보완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1~2회만 요구하고 반려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보완요구 관련 부적정 민원

(단위: 건)

계	1회 이하	2회 이하
27	8	19

※ ★★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참조

조치할 사항 ★★군수는

[주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법정 기간 및 기준 준수를 위해 민원처리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민원 보완요구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각 민원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강 원 도 통보(모범사례)

제 목 민원안내 점자책자 및 안내판 설치로 소수민원 적극 해결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도 79,503건, 2017년도 88,785건, 2018년도 100,7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민원도 2016년 889건, 2017년도 1,461건, 2018년도 1,977건으로 평균적으로 1,409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민원 발생 건수

(단위: 건)

2016년		2017년		2018년	
총 민원수	장애인 민원	총 민원수	장애인 민원	총 민원수	장애인 민원
79,503	889	88,785	1,461	100,737	1,977

※ ★★군 감사자료 재구성

강원도 18개 시·군의 장애인 관련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

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라 ① 공원,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③ 공동주택, ④ 통신시설, 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휠체어, 돋보기, FAX 등의 편의시설 등은 준비하여 장애인과 일반민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민원실로 이어지는 유도블럭의 경계 간 불분명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민원실에 점자로 된 민원종합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혼자서 민원업무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군(◆과)에서는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와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어 별도 점자 책자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다른 시·군들과 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2019년 민원 종합안내” 점자 책자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의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군 내 시각장애 인원을 파악하여 그 인원수와 ㉠실 내 필요한 수량만큼을 제작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2] 시각장애인 민원관련 점자 책자 제작현황

(단위: 명, 건, 원)

시각장애인수	점자책자 제작수	단가	지출금액	내역
308	350	10,000	3,500,000	책자 및 cd제작

※ ★★군 감사자료 재구성

또한 ★★군(◆과)에서는 “2019년 민원종합안내서 제작¹⁾“ 계획에 따라 정부 3.0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 전입세대가 알면 유익한 정보, 생활민원 안내, 주민복지 안내 등을 수록한 점자 종합 민원안내서를 시각장애인 세대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등 장애인 관점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안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군 ☎실 입구에는 “★★군청 ☎실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직원 호출벨 등 시각장애인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표 3] ★★군청 ☎실 점자 안내판 제작현황

(단위: 건)

안내판명	위치	제작비용	제작내역
★★군청 ☎실 점자안내판	☎실 출입구	1,3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위치 점자 안내 - 음성버튼안내 - 도움벨(직원호출)

※ ★★군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해당 업무 관련자들에 대하여 표창, 국외연수 및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과-2288(2019.1.30.), ◆과장 전결

[일련번호: 4]

강 원 도

훈계·주의

제 목 하천점용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군 ■과 △△담당 지방○○ W

② ☒☒군 ■과 지방◆◆ X

내 용

☒☒군(■과)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자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승인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 W는 2017. 7. 18.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담당으로 △△담당 업무를 총괄하였고, 지방◆◆ X은 2017. 7. 25.부터 2019. 3. 21.까지 하천업무 실무자로 하천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민원처리 지연 부적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17조, 제20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

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7. 7. 3. ○○군 ▽▽읍 Y의 하천점용허가 신청 민원(처리기간 14일)을 접수하고 검토하여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즉시 협조 문서를 시행해야 했으나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처리기한이 2017. 7. 20.인 민원 처리 건을 기간 연장 없이 8일이 지난 2017. 7. 28.에 관계 부서 의견조회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나 지연사유에 대한 통보 없이 47일을 지연하여 2017. 9. 26.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는 등 민원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2. 하천점용허가 업무처리 소홀

「하천법」 제33조, 제34조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

이 야기되어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²⁾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하천점용허가신청 시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각 하천점용의 목적, 영업의 규모, 선착장 또는 유선장 사이의 이격거리, 영업의 중복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표]와 같이 2017. 7. 3. ●●군 ▽▽읍 ××××-×번지 Y가 신청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2017. 7. 28.자로 관계부서 의견 조회 시 ①과에서 회신한(①과-10352 / 2017. 8. 3.) 검토의견에 “신청구역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업체인 산장레저스포츠의 영업구역으로서,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사전에 산장레저스포츠의 수상레저 등록사항 변경(영업구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고 군수 결재를 받았으나, 기득하천사용자인 산장레저스포츠의 수상레저 등록사항의 변경협이나 동의 절차 없이 2017. 9. 26.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였다.

[표] 하천점용허가내역

신청인		하천점용허가내용						허가기간
주소	성명	하천명	소재지	지번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강원도 ●●군 ××××-×번지	Y	북한강	▽▽읍	××××	제	180 (운행면적10,000㎡)	수상레저 스포츠사업	2017.9.26. ~2020.9.25.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기득하천사용자인 산장레저스포츠와의 영업구역이 중복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산장레저스포츠의 하천점용 기간 연장허가 시(2019. 12월 예정) 영업구역 협의 동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기득하천 사용자 동의 불필요: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할 사항

●●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민원업무 처리 시 관계부서 협의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을 통해 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류를 확인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강 원 도

통보(시정완료)

제 목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도세인 취득세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과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시설 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500KW 이하 발전사업(송·배전제외)에 대한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사무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과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기사업자가 임야나 전·답 등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정지 등이 수반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수적으로 발생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사실상 지목변경(전·답 →

잡종지 등)이 되나 전기사업자들은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개시 신고만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가 위치하고 있는 전기사업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사업개시를 신고 한 32건의 취득세 부과·징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14건의 전기설비 사업개시 신고 건에 대하여 취득세 10,560천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전기설비 사업개시 신고 건 취득세 미부과 내역

연 도	허가자	허가위치		허가내역					미부과금액
		읍면	지번	지적면적 (㎡)	지목	허가면적 (㎡)	목적	준공일자	
	14건								10,560,040
2017	Z	♡♡면	산107 170 171	14,975 2,079 1,260	임 전 전	3,321 1,265 71	태양광 발전시설	‘18.07.17	2,547,230
"	AA	♠♠면	87	2,036	답	2,036	"	‘18.01.26	104,850
"	AB	♠♠면	359-1 359-7	3,299 6,546	잡 전	1,807	"	‘18.03.20	133,730
"	AC	♣♣면	521-2	2,046	답	1,275	"	‘19.02.07	745,690
"	AD	♣♣면	521-2 522 523 524	2,046 691 1,567 3,550	답 대 답 전	771 691 1,567 3,550	"	‘19.02.07	816,450
"	AE	♠♠면	1517-2 1518	9,094 393	전 대	1,691 393	"	‘18.08.09	414,000
2018	(주)▼▼태양광 대표 AF	♡♡면	299-1	11,381	전	9,699	"	‘19.01.22	276,040
"	◆◆태양광발전소 대표 AG	♣♣면	436	2,155	답	1,437	"	‘19.01.25	335,640
"	◁△태양광발전소 대표 AG	♣♣면	429-1 436-1 437	129 713 455	전 답 답	129 713 455	"	‘19.01.25	314,000
"	●●태양광발전소	♣♣면	429	707	전	707	"	‘19.01.25	629,580

연 도	허가자	허가위치		허가내역					미부과금액
		읍면	지번	지적면적 (㎡)	지목	허가면적 (㎡)	목적	준공일자	
	대표 AH		436 437	5 586	답 답	5 586			
"	AI	♡♡면	805-1 806-2 806-3 806-5	166 3,470 807 802	전 답 전 전	166 3,470 807 802	"	'18.07.31	1,255,030
"	◀◀태양광발전소 대표 AJ	☼☼면	186 186-4	8,526 1,765	전 전	7,773 1,765	"	'18.10.26	1,321,080
"	AK AL	☼☼면	1247-1	3,983	전	3,983	"	'18.10.11	1,190,160
"	⊗⊗태양광발전소 대표 AM	☼☼면	852 852-2	2,430.2 9,967.1	전 전	2,430.2 457	"	'19.01.25	476,560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시정완료] ① 위 감사결과 지적에 대해 해당과에 [표] “전기설비 신고 건 취득세 미부과 내역” 10,560천 원을 부과·징수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감사기간중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통보하오니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민원처리기간 준수 관리 소홀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군(◎실)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법 제4조, 제6조 및 제17조에 군수는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군청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군수는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실 외 8개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총 64건의 민원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 195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구)♠과 AN 주무관은 장애인연금지급신청 민원을 2018. 7. 13. 접수하여 2018. 8. 24.

까지 처리하여야 함에도 195일이 경과된 2019. 3. 7.에 처리하였고, 같은 부서 AP 주무관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및 주거급여제공신청 민원을 2017. 11. 3. 접수 하여 2017. 12. 14.에 처리했어야 하나 68일이 지난 2018. 2. 20.에 처리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의 민원은 금융위원회 자료 요구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심 의 등을 거쳐 처리해야하는 사항임에도 민원처리연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8 일에서 길게는 48일을 지연하여 처리하였고, ◆과 AQ 주무관은 전기사업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등 타부서 협의로 처리기한 내 민원 처리가 어 려울 경우 민원처리 연장 등의 조치로 걱정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아 2019. 7. 10. 감사일 현재까지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76일을 경과하여 민원을 처리하거나 일부는 현재 처리중이고, ◎실에서도 개발행위허가 등의 민원처리 시 군부대 및 관련부서의 협의로 인해 처리 지연이 예상됨에도 처리연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짧게는 17일에서 길게는 30일을 경과하여 민원을 처리하였다.

특히, ⊗⊗군(◎실)에서는 각 부서의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에 대해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수시 확인·점검 및 독촉장 발급을 실시하지 않아 민원 처리기간이 장기간 경과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민원처리기간 경과현황

(단위 : 건)

계	10일 이하	11 ~ 20일	21 ~ 30일	31일 이상	비고
64	10	15	14	25	

※ ⊗⊗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참조

조치할 사항 ●●군수는

[주의] 법정 민원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민원처리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각 민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무 연찬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하천 및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관리 소홀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과)에서는 하천 및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를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서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민원 처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하고,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며,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수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하고,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민원서류가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어야하고, 행정자치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60쪽)에 의하면 민원

서식에 접수번호, 접수일자만 있는 경우 민원문서 표시인을 생략할 수 있는 서식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군수는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공문서의 종류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등으로 구분되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 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민원을 접수할 때에 민원 부서의 민원사무 처리부에 등록하여 접수인을 찍도록 하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작성해야하며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신청한 건을 제외³⁾한 [표 1]과 같이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서 11건에 대하여 자체 접수 및 처리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지 않는 등 민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민원사무처리부 미등록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청	비고
계		11	
민원사무처리부 미등록	2017	2	
	2018	4	
	2019	5	

※ ○○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참조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민원인에서 제외

2.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 관리 소홀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르면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번에 징수하여야 하고,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는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8년부터 2019. 7.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소하천 점·사용 허가 7건에 대한 점·사용료 486,730원과 하천 점·사용 허가 4건에 대한 점·사용료 56,43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하천 및 소하천 점용·사용료의 부과·징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하천 및 소하천 점용·사용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원)

허가번호	하천구분	점용기간	수허가자	미부과현황			비고
				계	2018년	2019년	
계	11건			543,160	203,090	340,070	
2018-1	소하천	2018.02.22~2022.12.31.	AR	434,960	195,680	239,280	
2018-7	소하천	2018.05.08~2023.05.07	AS	4,160		4,160	
2018-10	소하천	2018.06.08~2023.06.07	AT	2,020		2,020	
2019-9	소하천	2019.04.08~2019.12.31	AU	9,060		9,060	
2019-11	소하천	2019.04.26~2024.05.25	AV	7,660		7,660	
2019-12	소하천	2019.05.09~2020.05.08	AW	20,380		20,380	
2019-15	소하천	2019.05.24~2024.05.23	AX	8,490		8,490	
2017-12	하천	2017.08.22~영구	AY	2,410	2,410		
2017-13	하천	2017.09.26~2020.09.25	Y	27,900		27,900	
2018-3	하천	2018.03.12~2020.12.31	AZ	11,760	5,000	6,760	
2019-3	하천	2019.04.08~2021.02.28	♡♡면번영회	14,360		14,360	

※ **○○**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시정] 2018년부터 2019. 7. 10. 감사일 현재까지 하천 및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건 중 점·사용료를 미부과한 11건 543,160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하천 및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민원 접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민원 접수 후 처리를 하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